

송미령 “K-푸드 잠재력 무궁무진… 한식학교 등 정책 다각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 장관, 주요현안 관련 언론설명회
K-푸드, 양적·질적 성과 혁신 강조
농어촌 기본소득 부정수급 철저 단속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K-푸드의 지속 가능한 성장잠재력을 언급했다. 어린 시절 한국산 음식을 맛본 이른바 ‘K-푸드 키즈’가 성인이 되어서도 K-푸드를 즐기는 소비 성향이 세계 각지에서 나타날 수 있다는 견해다.

송 장관은 12일 세종청사에서 현안 관련 언론설명회를 갖고 “(올해가) K-푸드 수출의 양적·질적 성과 측면에서 완전히 패턴을 바꾸는 원년이 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푸드’와 ‘뷰티’는 통상의 수출 품목과는 다르다는 견해를 밝혔다. 외국인들이 한국산 자동차 한 대 구매하려면 굉장한 결심이 필요한 반면, 식품과 화장품 등은 손쉽게 접할 수 있다는 것.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농식품부 산하 공공기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농식품부

그는 “일단 한번 써 볼 수 있기 때문에 쉽게 많은 분들이 도전해 볼 수 있다”며 “어린 나이에 젊은이들이 도전한 것들이 나이 들어서까지 소비가 이어지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 “지금 우리

가 뿌려놓은 씨앗들이 지속적으로 상생세를 타게 되면 굉장한 효과를 보게 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연관 소비”를 강조했다. K-푸드, 뷰티, 소비재 등 함께 패키징 형태

로 특정 국가에 공략할 수 있는 부분도 검토 중이라는 설명이다.

송 장관은 “우리나라에 외국인 관광객 수가 확 늘어난 거 실감할 것”이라며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서 경험한 것들을 갖고 자국에 가서 지속적인 고객이 될 수 있도록 내한 관광객들을 그냥 보내지 않겠다는 게 (정부의) 전략”이라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이 같은 전략에 따라 한식학교 및 미식벨트 등을 좀더 다각도로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K-푸드 수출액 관련 질의에는 “당장 수출 목표를 달성하지 못 한다 해도 갈아놓은 노력이 헛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할 수 있을 때 최대한 힘을 써야 이 부분이 어느 순간 뚫다는 게 제 생각”이라며 “목표라는 게 사실 직선형으로 갈 수 있지만 계단식이 될 수도 있다. 정책 상태에 있다가 어느 순간 한 단계 훑 올라간다”고 했다.

이날 농식품부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K-푸드 플러스(+) 수출액이 역대 최고인 136억 달러를 기록했다. 전년 대비로 5.1% 늘었다. K-푸드+란 농식품과 스마트팜, 농기자재, 동물용의약품 등 전후방 산업을 아우르는 개념이다. K-푸드+ 수출액은 관련 통계가 시작된 2022년(119억2000만 달러) 이래 매해 역대 최고 실적을 경신하고 있다.

송 장관은 농어촌 기본소득 관련해, 위장전입 등에 따른 부정 수급을 보다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했다. 그는 “각 읍·면·군에 신고센터가 있다. 주소만 옮긴 건지 실제 거주하는지 그 지역 사람들이 제일 잘 안다”고 했다. 이어 “단약 (비거주자에게) 지급이 돼서 (부정) 사용을 했는데 적발될 시 회수를 하고, 이후 2년 동안 다시 받을 수 없도록 조치할 것”이라며 “지방정부와 함께 철저히 검증해서, 원래의도를 훼손하는 그런 형태가 있다면 엄격하게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metroseoul.co.kr

김정관 장관 “가짜 일 덜고 ‘진짜 성과’ 증명” 구인배수 0.39… 실업급여 지급 사상 최대

산업부 업무보고 마무리

AI 대전환·MASA 금융 지원 등 의제
김 장관, 사회적 책임·안전 문제 강조

산업통상부가 산업·자원·수출 분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연초 업무보고를 마무리하고, 성과 창출과 사회적 책임을 국민 눈높이 이상으로 끌어올릴 것을 주문했다.

산업부는 12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산업 분야와 자원·수출 분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중점 추진과제 이행계획을 점검하는 3·4회차 업무보고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장·차관을 비롯해 실·국·과장, 담당 사무관과 공공기관 임직원 등 90여 명이 참석했다. 특히 민생과 경제안보와 직결되는 자원·수출 분야 업무보고는 KTV를 통해 생중계됐다.

산업 분야 업무보고에는 한국산업단지공단, 산업기술진흥원(KIAT), 산업기술기획평가원(KEIT), 디자인진흥원, 세라믹기술원, 로봇산업진흥원, 탄소산업진흥원 등이 참석해 ▲5급3특 기반 지역 성장엔진 육성 ▲제조업 AI 대전환(AI) ▲첨단·주력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이날 오후 열린 자원·수출 분야 업무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12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산업통상부 공공기관(산업 분야) 업무보고’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산업통상부

보고에는 석유공사, 광해광업공단, 석탄공사, 강원랜드, 코트라, 무역보험공사 등이 참석했다. 자원 분야에서는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화와 자원안보 강화, 석유공사 재무구조 개선, 재자원화산업 육성, 공공비축 확대 방안이 논의됐다. 수출지원 분야에서는 수출 1조 달러 시대를 겨냥한 금융·투자 지원과 시장·품목 다변화 전략, MASGA 등 대미 프로젝트 중장기 금융 지원 방안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총 4차례에 걸친 공공기관 업무보고를 마무리하며 “공공기관의 기본 책무는 맡은 업무를

정확히 이해하는 데서 출발한다”며 “산업부 소관 공공기관 임직원들은 각 분야에서 최고의 전문가가 되어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아직 기존 업무를 관행적으로 답습하는 많은 사례들이 곳곳에서 보인다”며 “새로운 환경에 맞춰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새로운 시각에서 업무를 재창출해달라”고 주문했다.

김 장관은 특히 사회적 책임과 안전 문제를 강하게 언급했다. 김 장관은 “안전 문제에 관해서는 기관장이 책임을 지고 원점에서 철저히 점검하고, 기관의 주요 성과와 현안을 국민과 국회에 상세히 설명하는 등 소통의 접점을 확대해달라”고 했다.

김 장관은 “오늘의 업무보고는 일회성 계획이 아니라 국민과의 약속”이라며 “가짜 일을 덜어내고 국민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진짜 성과’로 공공기관의 존재 가치를 증명해야 한다”면서 범정부적으로 추진 중인 ‘가짜 일 줄이기 프로젝트’에도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산업부는 이번 업무보고에서 도출된 주요 개선 과제를 관리카드로 체계화하고, 장관 주재 공공기관 정례 간담회를 통해 이행 상황을 지속 점검할 계획이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고용부 2025년 12월 노동시장 동향
기업 구인수요 반등에도 취업난 여전

청년층을 중심으로 한 구직난이 좀처럼 풀리지 않고 있다. 기업의 구인 수요가 3년 만에 소폭 반등했지만, 구직자 증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일자리 1개를 놓고 3명 가까이 경쟁하는 구조가 이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실업급여 지급액은 역대 최대 규모로 불어났다.

고용노동부가 12일 발표한 ‘2025년 12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고용24를 통한 기업 구인인원은 16만9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6.5% 증가했다. 기업 구인 증가세는 34개월 만이다.

하지만 같은 기간 구직인원은 43만2000명으로 10.0% 늘어나면서, 구직자 1인당 일자리수를 의미하는 구인배수는 0.39에 그쳤다. 이는 전년 동월(0.40)보다도 낮은 수준으로, 체감 취업난이 여전히 심각하다는 방증이다.

청년층의 고용 부진은 통계에서도 뚜렷하게 나타난다. 29세 이하 고용보험 가입자는 전년 동월 대비 8만6000명 줄어 2022년 9월 이후 40개월 연속 감소세

를 이어갔다. 인구 감소 영향이 있지만, 제조업·건설업 등 전통적인 청년 취업처의 고용 위축이 장기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구조적 문제로 지적된다.

특히 제조업과 건설업 부진은 청년 일자리 회복의 발목을 잡고 있다. 제조업 고용보험 가입자는 7개월 연속 감소했고, 내국인 기준으로는 27개월째 줄고 있다. 건설업 역시 29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두 업종 모두 청년층 비중이 높은 분야다.

일자리를 찾지 못한 구직자들이 늘어나면서 실업급여 지출도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구직급여 지급액은 12조2851억원으로, 코로나19 확산기였던 2021년을 넘어 역대 최대 규모다. 단기적으로는 지급자 수가 줄었지만, 고용안정망의 존속도는 오히려 커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편 전체 고용보험 상시가입자 수는 지난해 12월 말 기준 1549만3000명으로 전년 대비 1.2% 증가했지만, 증가분 대부분은 60세 이상 고령층에서 발생했다. 같은 기간 60세 이상 가입자는 16만4000명 늘어난 반면, 청년층은 감소세를 벗어나지 못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공정위, ‘소비자24’ 서비스 환경 개선

정보 접근성·이용 편의성 제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종합지원누리집 ‘소비자24’를 소비자 중심 서비스 환경에 맞게 개편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개편은 정보 접근성과 이용 편의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소비자24는 상품·안전 정보 제공부터 피해구제까지 소비생활 전 과정을 지원

하는 범정부 통합 플랫폼으로, 현재 95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2018년 5월 서비스 개시 이후 소비자 정보 창구로 활용돼 왔다.

이번 개편에서는 범정부 디자인 표준인 ‘KRDS(Korea Design System)’를 적용해 화면 구성과 메뉴 체계를 직관적으로 개선했다.

시각적 편의성도 강화됐다. 기존 화면

대비 가독성을 높인 ‘선명한 화면’ 기능을 추가해 시각기능에 제약이 있거나 저조도 환경에서도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다크모드와 유사한 기능으로 콘텐츠 가시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또 소비자 이용 빈도가 높은 상품 및 안전정보를 품목·유형별로 재구성해 물품 정보, 리콜 정보, 인증 정보를 통합 제공함으로써 소비자가 관심 정보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농어촌공, ‘선제적 농업용수 확보 대책’ 추진

한국농어촌공사가 ‘선제적인 농업용수 확보 대책’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올해도 농업인이 안심하고 농사에 전념할 수 있도록 관리·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지난해 11월부터 모내기 철 용수 부족이 우려되는 저수지 62곳을 선별해 집중 점검·관리를 시작했다. 해당 저수지에 물을 채우는 한편, 인근 하천에 간이양수장을 설치하는 등 현장 맞춤형 용수 확보 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또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기상청, 한국수자원공사 등 관계 기관과 함께 매주 관계부처 합동 가뭄 대책 TF(전담반)를 가동하고 있다.

주요업 한국농어촌공사수자원관리이사는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은 농업인의 영농 여건을 보장하고, 국민에게 식량을 공급하는 데 있어 핵심 요소”라며 “기후변화 속에서도 농업인이 안심하고 영농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한발 앞선 용수 확보와 관리에 공사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 기자